

“추석 전 처리” vs “통신비 철회” 추경 진통

여야, 4차 추경안 심사 착수 통신비 2만원·처리 시점 이견 처리일정 합의 불발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4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등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를 시작으로, 이번 주 중 추경 관련 6개 상임위를 잇달아 개최한다. 여야는 이번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처리 시점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추석 연휴(30일~10월 2일) 전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간사인 박용근 의원은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하더라도 사업이 집행되면 국무회의 등 적어도 몇 개월이 필요할 만큼, 추석 전 집행을 위해서는 18일에는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4차 추경은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될 때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확실하다. 이번 주 내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런데 야당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추석이 지난 뒤까지 추경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꼼꼼한 심사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이다. 동의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데 병원비 항목을 보겠다고 수술을 미루겠다는 꼴이다. 필요하다면 추경 심사 인원을 배로 늘

리면 된다”면서 “일주일 내내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하자. 물리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극복하면 된다. 작은 것을 발목 잡다 국민의 삶이 파탄 나는 것을 방지한다”며 “역사는 21대 국회를 죄인으로 기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방침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신숙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국제 발행으로 마련되는 7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만큼 정밀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빛을 내서 추경하는 데 눈 감고 심사할 순 없다”며 “가급적 추석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할 것이며, 추석 전 지급 여부는 여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여야의 견해를 반영하듯 예결위는 아직 4차 추경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특히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비롯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도 추경안을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9300억원이 든다”며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등 일부 현안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추석 전에 현장에서 최대한 집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4차 추경안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재차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통신비 이견으로 4차 추경안 처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지지율 45.6%

리얼미터 조사...민주당 33.4%·국민의힘 32.7%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 밖에서 추월했고, 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으로 국민의힘과 격차가 1%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닷새간 전국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5%포인트 내린 45.6%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오른 50.0%였다. 부정 평가가 50%대에 진입한 것은 8월3주차 조사 이후 3주 만이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4.4%포인트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 ± 2.0%포인트) 밖이다. 긍정-부정 평가 격

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 역시 3주 만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부산·경남(37.8%·5.9%포인트 ↓), 성별로는 남성(42.2%·6.6%포인트 ↓), 연령대별로는 50대(45.4%·3.4%포인트)에서 하락폭이 컸다. 특히 20대는 긍정 평가율이 36.6%(2.4%포인트 ↓)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4%, 국민의힘 32.7%였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4%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1.7%포인트 올랐다. 이어 열린민주당 6.6%, 정의당 5.0%, 국민의당 4.4% 등의 순이었다. 무당층은 14.2%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법인명의 고가 수입차, 감독 강화해야”

신규등록하는 최고급 슈퍼카의 80%는 법인차로 조사됐다.

이형석(복구율) 국회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억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율은 6.1%에 그쳤지만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차량에선 법인차 비율이 51%였고, 4억원 이상 최고급 차량 중에서는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1억원 이상 고급차는 물론,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 이른바 슈퍼카의 법인차 비율이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승용차 신규 등록 현황을 보면, 1억원에서 4억원 미만 고급

승용차의 법인차 비율은 70%대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서 나타난 동일 가격대의 법인차 비율 51%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의 경우 2019년 법인차의 신규 등록률은 87.2%로, 동일 가격대 전체 법인차 비율 62%보다 24.8%포인트 높았다.

이형석 의원은 “무늬만 회사차”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하여 조세정의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檢 ‘정의연 의혹’ 윤미향 기소

“보조금 3억6천만원 부정수령”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연 연대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정전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성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정의연·정대협의 부실 회계 의혹은 지난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 기자회견 이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시민단체들이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습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BTS 병역 혜택, 공감대 필요” 서육 국방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서육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혜택 문제에 대해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 후보자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규정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편법으로 특혜를 입었다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서삼석 “임업인 소득 보장 위한 직불제 도입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4일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임업직불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년 임가의 평균 소득액은 3800만원으로 어가의 78%(4800만원), 농가의 91%(4100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임업인들의 소득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업직불제 법률안은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에 대한 직불제 ▲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에 대한 직불제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불제 도입을 구성된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시급하다”면서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면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공익적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산림경영을 향상 및 산림 건강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정부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임업인의 ▶
학부 0621 605-1114

www.kwangshin.ac.kr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소로 36